

# 완도·강진까지 포함, 범위 확대해야

오는 24일 발표되는 정부의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에 대해 전남도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해남·영암) 건설 지역 및 신안·진도·완도·강진까지 포함해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22일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큰 시각에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 구상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우선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의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서남해안 전체가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으므로 무안·목포 중심의 성장 계획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고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논리에 서다.

더욱이 서남해안을 권역별로 나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표 참고)은 중복 과잉 투자 및 행정절차의 엇박자 등 각종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어 통합추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의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에 기본적으로 J프로젝트가 추진

## 전남도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 재설정 건의

### 호남고속철 등 SOC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요청

### J프로젝트·화원단지 묶어 통합 개발계획 필요

#### J-프로젝트,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 S-프로젝트 비교

구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J-프로젝트)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 (무안·목포 성장계획)	서남해안 개발계획 (S-프로젝트)
대상지역	해남·영암군 일원, 3천만평	목포시·무안군 일원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신안 등 총 4억 1,000만평(실제 개발 9천만평)
추진주체	민간기업 주도+정부지원	중앙정부 주도+민간자본	주관기업설립(한국·싱가포르·미국·일본)
개발기간	1단계: 2006~2012(1천만평) 2·3단계: 2016까지(2천만평)	1단계: '07~'09(7만주) 2단계: '10~'13(13만주) 3단계: '14~'16(16만주)	20년(2006~2025)
주요시설(개발사업)	F1 국제자동차경주장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레저스포츠 단지 월드일리지(교육, 의료, 주거)	세계적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초 조성 지역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무안공항 주변에 공항물류단지 조성 과학R&D 단지, 전시무역종합센터 생명공학단지, 의료 R&D 클러스터 미래도시와 실버타운, 랜드마크 아일랜드
투자재원	35조원(1단계 10조원)	7조 1,800억원	50조원

되고 있는 해남과 영암 및 신안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진도·완도·강진까지 프로젝트 대상을 확장해 말 그대로 서남해안의 면모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과 J프로젝트, 해남 화원관광단지까지 한 데 묶는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만 인접지역개발에 따

른 시너지효과를 거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J프로젝트는 투자수요와 여건에 따라 앞으로 추가 확대가 가능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을 추진중인 'F1(포틀러 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기업

도시 시범사업으로 이미 포함돼 있고 2010년 대회가 확정된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의사 표명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해남 화원관광단지는 사업의 활력을 찾기 위해 J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하고 고산 운선도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등도 지역 관광자원 활용차원에서 세부 추진과제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신안·진도·완도·강진 등 낙후돼 있는 서남해안 지역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발전구상에 포함시킨다면 지역주민의 폭넓은 이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발전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SOC 조기 확충 방침 및 투자재원 마련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계획을 앞당겨 2015년 내에 마무리하고 국도 77호선 서남해안일주도로 건설은 예산의 집중투자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표명해 달라라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낙후된 서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을 포함해 인근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남도대학 통합후 학사운영 방안” “되풀이 급식사고 원인 왜 못찾나”

###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는 22일 6일째 광주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학교급식시설의 위생과 학교내 공기질 문제를 추궁했다.

유재신 의원(민주·광산 2)은 이날 “K여고의 경우 지난 8월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원인균을 찾지 못하는 등 해마다 발생하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책임지는 기관과 업체가 없다”며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재발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조리실과 세척실이 구분되지 않은 학교가 132개, 조리실 방방시설이 없는 학교가 197개나 되는 등 급식시설에 대한 대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자 의원(우리·비례)은 이날 “서울의 경우 올해 153개의 학교와 유치원의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143곳에서 1개 이상의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광주역의 경우 54개 학교의 공기질을 측정할 결과, 한 학교만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런데도 광주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두통과 불쾌한 냄새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공기질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측정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

고 감사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남도대학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 통합 후 방안 학사운영을 집중 질타했다.

김석원 의원(민주·무안1)은 “지난 2003년 담양대학교 남도대학이 통합된 후 학과는 24개에서 15개로, 학생 정원은 2천400명에서 1천960명으로 크게 줄었는데도 교수는 51명 그대로이고 기성회칙은 오히려 4명이나 늘어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5년 전일 감사 채용 과정에서 당초 모집 공고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했음에도 일부 학과의 경우 석사학위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를 제치고 임용됐으며, 자치소방 행정과의 경우 소방전문가 대신 일반 행정학과 출신이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학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남도대학 보직 교수의 주당 평균 강의 시간이 3.3시간으로 전국의 다른 도립대학 평균 6.6~13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기성회칙 예산 16억1천400만원 중 인건비가 65.0%(10억4천900만원)를 차지하는 등 재정운영에도 문제가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의원 53% 버블세븐 지역 거주” “주택문제 계급적 시각 변질 정쟁 유발”

〈강남·서초 등〉

### 여야 강남 부동산' 설전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의원 소유 강남 부동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월 재산신고에 의하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거주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127명 중 69명으로 전체의 53%에 해당했다”며 “공성진 의원은 강남구에만 3채, 이종구 의원은 4채 등 다수가 2채 이상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을 강남 투기꾼과 어떻게 구별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어 “이들이 보유한 집의 신고가격은 444억8천163만원, 국민은행의 지난 10일 공시가격과 비교하면 총 1천23억 77만원에 달한다”면서 “부동산으로 부자된 당은 공공의 적이며, 한나라당은 부동산 망국 병 부추기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영규 부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거주자의 자유가 있다”면서 “청와대 이백

만 전 홍보수석이 오명을 뒤집어쓰고 물러난 것은 강남에 거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20억원 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며 서민에게는 지금 집사면 낭패라고 하는 걸 다르고 속 다른 행태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부대변인은 “여당은 거주자의 자유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문제를 계급적 시각으로 변질시켜 정쟁을 유발하는 좌파적 시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2일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당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동산특위는 첫 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까지로 하되, 연말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향후 5차례 회의를 소집해 ▲분양원가공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등 분양제도방식 ▲분양가 인하방안 ▲공공주택 공급확대방안 ▲유동성 문제 및 투명화 방안 등 5가지의 의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연남뉴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 특위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 /연남뉴스

## 광주시의회 해외연수 95% '관광성'

### 연수목적부합비율 5.7% 불과 전국 광역의회 평균은 13.3%

지난 4대 광주시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지나치게 관광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인천지역 시민단체 공동 주최로 22일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예산낭비 대응 포럼'에서 장극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출발 및 도착 비행시간을 제외한 연수시간 대비 연수목적부합여행시간을 계산한 결과, 광주시의회의 연수목적부합비율은 5.7%에 불과했다”며

“이는 광역의회 평균 13.3%, 기초의회 평균 16.9% 등보다 훨씬 낮은 것이어서 대부분의 연수가 관광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의 여행목적부합비율은 14.5%로 전국 평균치보다 약간 높았다. 정 사무처장은 또 공무원 노조의 자료를 인용, “광주시의회, 광주 남구의회, 화순군의회, 무안군의회 등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 대상 연수 중 1회 이상을 100%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보성군의회의 해외연수가 다녔고 의정활동에 도움과 상관없이 연수예산을 미리 끌어다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24.2%), 강서 대부분의 연수가 관광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의 여행목적부합비율은 14.5%로 전

**수능시험 끝!! 이젠, 중국어 시작!!**

수험생 특별반 (수업 11월 개강)

3개월이던 중국어 편다 (매월 초개강)

리틀자이나 中国語学院

TEL: 062-333-9582

**맞춤가발입니다!**

1. 광주지역 으뜸 Optio 가발

2. 인 사노화

3. 여성모자

Sens-Mo 062|676-3545

062|432-3545